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북연구원(T.063-280-7100/F. 286-9206)
<http://www.jthink.kr>

▪ 문의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김시백 부연구위원
(063-280-7131/kimbio96@jthink.kr)

▪ 담당실장 :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
(063-280-7111)

보도시점 : 2018년 5월 4일(12시)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전북은 경제성논리에 대규모 사업 추진은 제한적 전북 예타통과사업의 평균사업비는 전국 평균 79% 수준 사업계획안에 비해 2,421억원 줄어든 내용으로 통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5가지의 접근 방식 전환 제시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었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방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이슈브리핑 166호 ‘예비타당성 조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접근 방식 재고해야’를 통해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제성(B/C) 분석에 치우쳐 있는 반면, 지역균형개발 및 안전성 강화 등 국가 정책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433건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의 59.6%인 258건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258건의 사업 중 1/3에 해당하는 84건의 사업은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정책적 당위성에 의해 사업 추진이 결정된 사례이지만, 이 경우에도 B/C값이 최소 0.7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투입되는 사업 규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분석 항목인 경제성 분석으로 인해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이 어렵고 대규모 사업 규모 축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전라북도는 제안된 사업의 65.2%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통과율 측면에서는 평균 이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 하지만, 통과된 사업들의 평균 사업비 측면에서 평균 사업비는 3,665억원으로 전국 평균의 79%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원칙적으로 재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비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전북의 경우 사업계획안에 비해 평균 2,421억원이 줄어들어 타 시도에 비해 매우 크게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왔다.

- 따라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의 접근 방향을 5가지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편익을 다양한 사업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함에 따라 사회적 변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탈피하여 환경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 산업의 융합화와 연계 성장을 고려하여 국책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산업의 부가가치 상승효과를 직접편익에 포함하여 분석해야 한다.
 - 지역의 인구뿐만 아니라 관광객까지 포함한 체류 인구 수요를 SOC의 수요 분석에 적극반영해야 한다.
 - 경제성 중심의 AHP 종합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 특성에 따라 국가정책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가중치 재조정이 필요하다.
 - 지역낙후도지수에 따른 낙후지역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AHP 종합분석의 가중치 범위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